

어울림이 있는 학교, 꿈을 심는 교육 공동체

2019학년도

2차 인성·인권(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연수

◆ 일시 : 2019. 9. 6.(금) 15:00

◇ 장소 :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JEOLLABUKDO GUNSAN OFFICE OF EDUCATION

목 차

1. 학교장 자체해결제 강의(안) 07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9

3.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안) 69

4. 부록 85

□ 일 정 표

2019. 9. 6.(금)

시 정	내 용	담 당 자	비고
14:50 ~ 15:00	• 등록		
15:00 ~ 15:10	• 개회		
15:10 ~ 16:00	• 학교폭력자체해결제 도입에 관한 사안처리 절차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이효진 학교폭력상담사	
16:00 ~ 16:30	• 전달 사항	담당 장학사	
16:30 ~	• 폐회		

1. 학교장 자체해결제 강의(안)

학교의 장 자체 해결 제도

2019년 9월 6일(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제도

➢ 2019년 9월 1일 시행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2020년 3월 1일 시행

❖ 불복 절차 일원화 (피,가해학생 재심, 도교육청 행정심판으로 통합)

➢ 2020년 3월 1일 시행

I. 추진배경 및 경과

II. 전북교육청 학교 자체 해결 제도

III. 법률 개정 주요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서식

붙임 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붙임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 1부.

붙임 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1부.

I.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 경직된 사안 처리로 인해 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 분쟁 심화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개선 요구 지속
- ❖ 교육적 기능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 및 학교문화 개선 필요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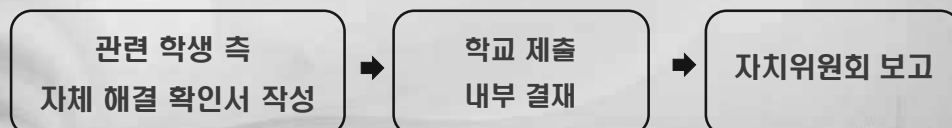
- ❖ 학교폭력 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시행 : 2018년 11월
- ❖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방안 발표 : 2019년 1월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 2019년 3월
 -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 2019년 4월 ~ 7월
 -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년 8월 2일

II. 전북교육청 학교 자체 해결 제도

II 전북교육청 학교 자체 해결 제도

시행 개요

- ❖ 시행시기 : 2017학년도부터 이미 시행 중
- ❖ 근거 : 학생생활교육계획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 ❖ 기준 : 관련 학생 측 모두의 동의[합의]에 따라 자체 해결 가능



III. 법률 개정 주요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III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개정 취지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

➔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의 심의위원회 : 2020.2.29.까지는 자치위원회로 인정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3항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붙임1}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붙임2}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제13조의2 제2항의 심의위원회는 ' 2020.2.29.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자체 해결 기준

- ❖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사안 조사, 가해학생 인정을 통해]
-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붙임1} [피해학생 서면 동의서 필요]
- ❖ 4개 항목의 경미한 사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붙임2}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하나의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경미한 사안 기준 [전담기구 심의]

-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미 제출한 경우,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
 -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복구가 완료됐거나 복구해 줄 것임을 피해 측이 인정한 경우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피해 측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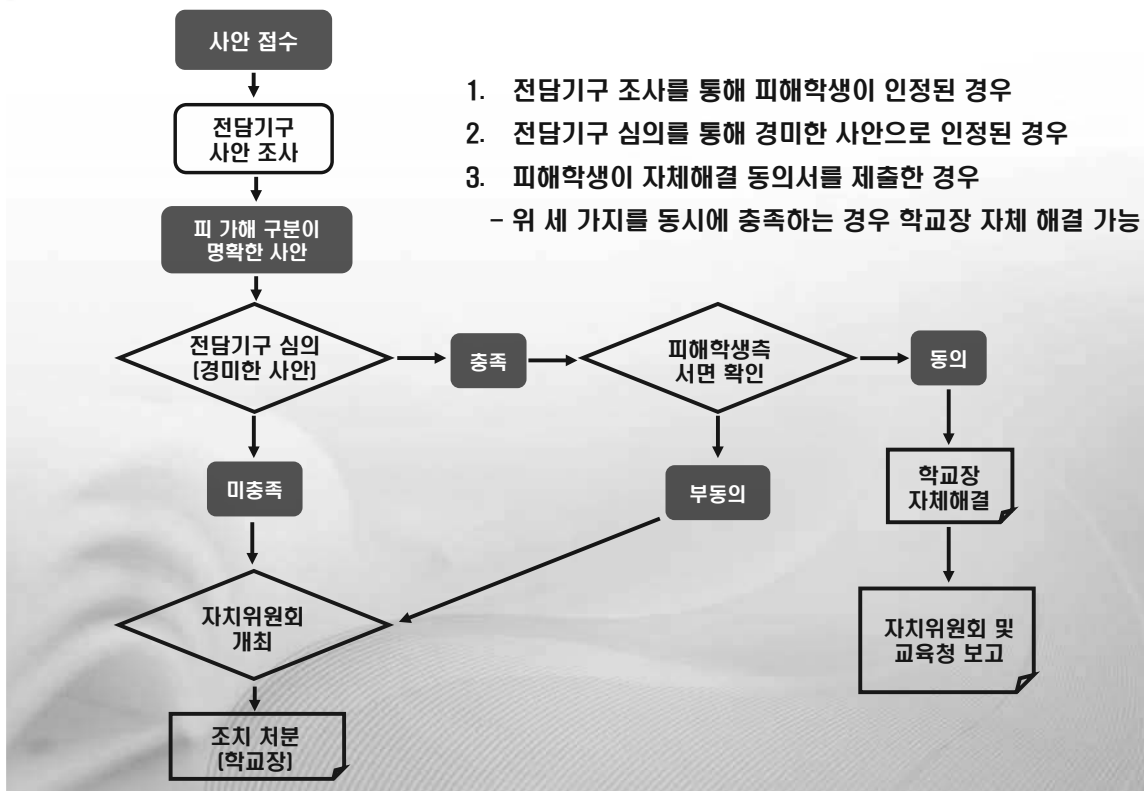
1. 전담 기구는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2. 자체 해결이 불가한 사안은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7일 연장 가능]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법률 개정 주요 내용[학교장 자체 해결]



붙임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서식)

20 학년도 _____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회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석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4. 협의주제 : 사안번호 2000-00 호 학교장의 자체해결 심의																	
5. 협의 내용																	
<p>●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필수 확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th> <th>충족</th> <th>미충족</th> </tr> </thead> <tbody> <tr> <td>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td> <td></td> <td></td> </tr> <tr> <td>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후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td> <td></td> <td></td> </tr> <tr> <td>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td> <td></td> <td></td> </tr> <tr> <td>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후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후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장 (인)																	

붙임2.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 (서식)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p>상기의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OO학교장 귀중</p>				

붙임3.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보고서 (서식)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피해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 양자 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승낙,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함 2000.0.0</p> <p style="text-align: center;">00학교장</p>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769
----------	-------

제안연월일 : 2019. 7.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 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784호	전희경의원	‘16.10.21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17.2.14)
	제6961호	이동섭의원	‘17.5.19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제7760호	백혜련의원	‘17.7.4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제8468호	홍의락의원	‘17.8.10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8.3.19.)
	제9144호	이양수의원	‘17.9.7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소위 직접회부(’ 17.9.26)
	제11745호	윤상직의원	‘18.2.2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소위 직접회부(’ 18.3.22.)
	제12271호	이종배의원	‘18.3.2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8.11.8.)
	제13454호	권미혁의원	‘18.5.4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8.11.8.)
	제13980호	김한정의원	‘18.6.22.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8.11.8.)
	제16067호	곽상도의원	‘18.10.25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8.11.8.)
	제17634호	김영호의원	‘18.12.20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9.3.11)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9.3.14.) 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9.3.25.)에서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2013년 약 17,800여 건→2017년 약 31,000여 건)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안 제12조제1항).

나.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안 제13조제1항).

다.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바.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 를 “심의위원회가”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자치위원회” 를 “다만, 심의위원회” 로, “교육감의” 를 “교육감” 으로,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을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을 “대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선도” 를 “대한 교육, 선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대하여” 를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을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으로, “학교” 를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치위원회의” 를 “심의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를 “심의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치위원회” 를 “심의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 를 “심의위원회의” 로 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으로”를 “, 학부모 등으로”로,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를 “제1호,”로, “자치위원회에”를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학교의 장이”를 “교육장이”로, “「초·중등교육법」”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

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학교의 장에게” 를 “교육장에게” 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재심청구)” 를 “(행정심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 장이” 를 “교육장이” 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를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로, “학생” 을 “가해학생” 으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치위원회가” 를 “심의위원회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는” 을 “심의위원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 를 “심의위원회가”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학교가” 를 “교육지원청이” 로,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을 “직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를 “교육감과의” 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치위원회에” 를 “심의위원회에” 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에” 를 “심의위원회에” 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 를 “심의위원회의” 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의” 를 “심의위원회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u>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u> ,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 ----- ----- ----- <u>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u> ,-----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생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u>자치위원회</u> 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u>심의위원회</u> 가----- ----- ----- -----.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
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
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
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생략)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
계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기능) ① -----

-----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
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다만, 심의위원회--

-----교육
감-----교
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
회를-----.

- ② 심의위원회는-----

-----.
1. -----대책
 2. (현행과 같음)
 3. -----대한 교육, 선도-

4. 5. (생략)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

4. 5.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
지원청-----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 6. (생략)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1. 심의위원회-----

2. ~ 6.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

④ -----심의위원회의-----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생략)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의위원회의-----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

③ -----

-----,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심의위원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

-----제1호,-----

-----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1. ~ 6.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

③ -----
-----교육장은-----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

-----.

1. ~ 9.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

③ -----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
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
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
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
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
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

-----심의위원회에
서-----.

④ -----

-----심의위원회에-----
-----.

⑤ 심의위원회는-----

-----.

⑥ -----
-----교육장은-----
-----.

⑦ 교육장이-----

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생략)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생략)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위원회는-----

⑩ (현행과 같음)

⑪ -----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가해학생-----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심의위원회가-----

④ 심의위원회는-----

⑤ 심의위원회가-----

⑥ -----교육지원청이-----

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
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
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
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
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
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
다.

-----직접-----
-. -----
-----.

⑦ -----

-----교육감과-----

----. -----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
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
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
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
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
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
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
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
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생략)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
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심의위원
회에 -----
--.

④ -----

-----심의위원회에-----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심의위원회의-----
-----.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
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생 략)

-----.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
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
-----심의위원회의-----

-----.

② (현행과 같음)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12. 1. 26.]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중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504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고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⑦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⑧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

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제도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제도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제도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제도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제도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제도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제도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제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제도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제도가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

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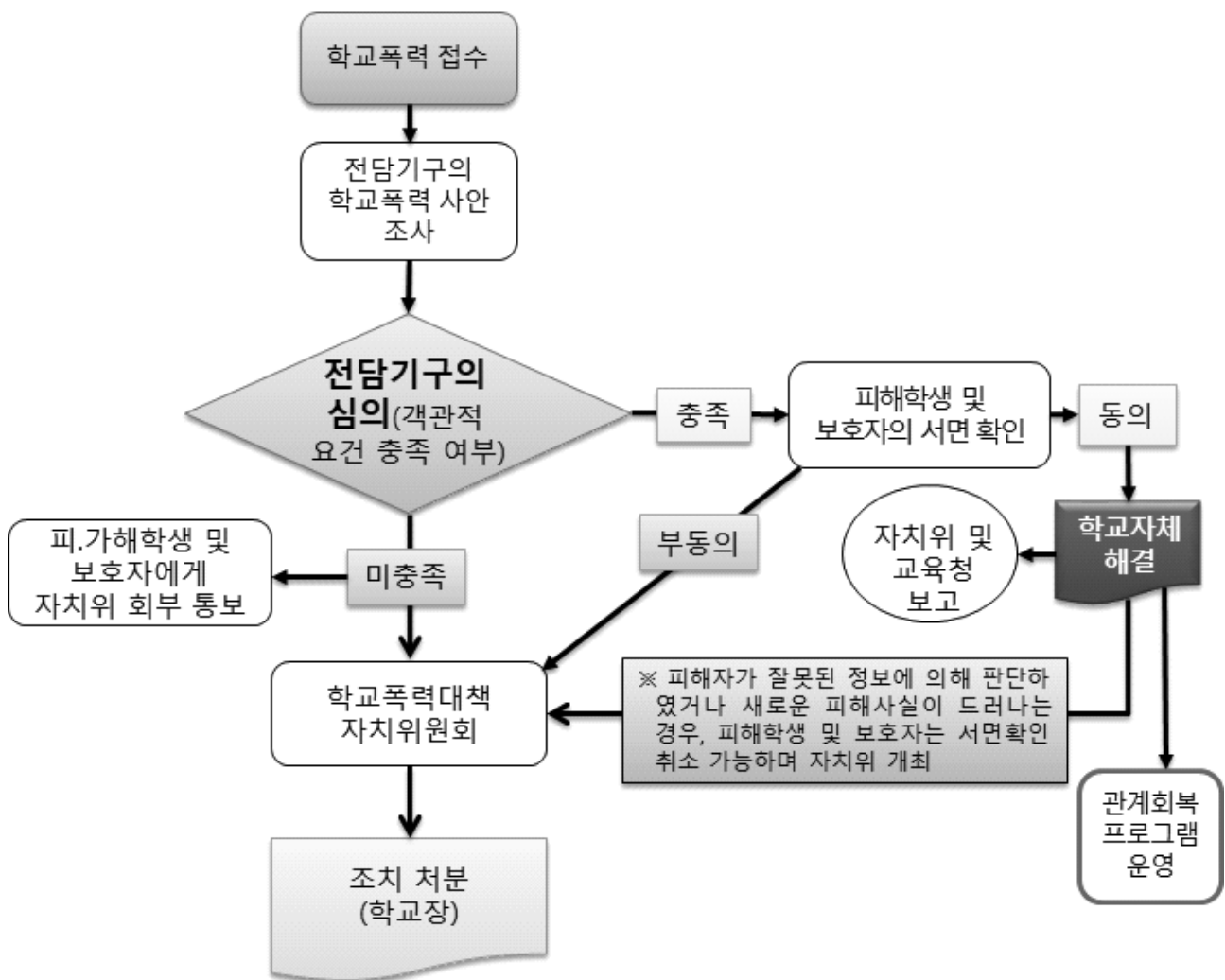
**3.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안)**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안)

II. 사안처리 절차

2장. 사안조사 (기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32 이하 일부 개정)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에 따른 사안처리 흐름도(안)>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가능 사안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 피해 관련학생 입장에서 지속성 판단(A학생이 B학생 1회, C학생 1회, D학생 1회 피해를 준 것은 지속적으로 볼 수 없음)
 - ※ 피해 관련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또는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지속적이라고 판단하여 학교자체해결 할 수 없음.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학교자체해결 이후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 법률 제13조의2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2.29.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참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방법

○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 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관련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별로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체 해결하거나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2019.9.1. ~ 2020.2.29.까지는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부모를 포함시키지 않고 구성·운영한다.(전담기구에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법률은 2020.3.1.부터 시행됨)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서면 확인 동의

-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복구되었다는 내용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내부결재(전담기구 사안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서, 관련학생 및 보호자 서면 동의서 첨부)

○ 자치위원회 보고(정기회의 때 가능)

○ 교육청 보고 및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 관련학생의 교육적 선도 및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재적교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재적교에서 가해 사실을 조사한다.
- 학교자체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이 때 가해학생 학교에서는 가해 사실 조사서를 피해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 양 기관 모두 학교자체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자체해결로 판정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자체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4. 긴급조치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 21조).
 -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음.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 제7항)

참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5. 상담 시 유의사항

□ 학생 상담

-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 **관련**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해 **관련**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자치위원회 결정전에는 교사 임의적으로 가해·피해 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 관련학생 상담]

-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피해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 가해 **관련**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 자치위원회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피해 관련 학생 상담시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됨.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오해받을 수 있음.

[가해 관련학생 상담]

-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 **관련**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 **관련**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 조사과정에서 가해 **관련**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는다.
-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목격학생 상담]

-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 보호자 상담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가해·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나, **다른 관련학생과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한다.
-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자체 해결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 **관련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 확인된 사실을 보호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 관련학생측이 가해 관련학생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상담시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됨.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오해받을 수 있음.

예시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 상담

1. 피해사실의 확인 단계

가.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학생의 학교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나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나.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다.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00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2.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자체해결 대상 여부를 결정,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자체해결 하거나 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며, ……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한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00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5.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00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때의 대처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선도·교육)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가해 **관련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 **관련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 **관련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관련학생**에 대한 가해 **관련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 **관련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가해 관련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피해 관련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 가해 관련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 가해 관련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예시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상담

1.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2. 상대학생의 피해정도 고지단계

(현재 OO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_____하고 심리적으로는 _____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의 경우에 자신의 학생이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 관련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 관련학생측에서 피해 관련학생의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5. 화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언 단계

가.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에 자신의 학생이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 관련학생측에서 피해 관련학생의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안번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자체해결 동의서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확인사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 받았습니다. (복구 받지 못한 경우 복구 확인 서약서 제출 가능) 3.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후에 보복 행위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을 전담기구에서 학교자체해결 사안으로 심의·결정 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 00학교장 귀중 </div>				

선택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 사안번호:

재산상 피해 복구 확인서

피해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사안으로 처리 되기를 희망하는 바 재산상 피해 복구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 (서면진술)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
경우
(증빙서류)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필수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20 학년도 _____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회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4. 협의주제 : 사안번호 2000-00 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심의		
<p>5. 협의 내용</p> <p>가. 필수 확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이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여부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여부 - 학교폭력의 지속성 여부 -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 행위 여부 <p>나. 기타 협의 내용</p>		
6. 결정사항		
관련 학생	결정사항	
○○○	제13조의2제2항, 제14조4항에 의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	제13조의2제2항, 제14조4항에 의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p style="text-align: right;">작성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회 위원장 (인)</p>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시, 필수

* 사안번호:

학교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피해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자체해결 결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 양자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승낙,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첨부 문서> 1.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보고서 2.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보고서 3. 피해학생 보호자의 학교자체해결 동의서 4. 피해학생 보호자의 재산복구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학교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함 2000.0.0		
			결재	담당	교감

<법률 제13조의2제1항 자치위원회(2020.3.1.부터는 심의위원회) 보고서 사용>

4.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기존	변경	시행일자
명칭변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0.03.01
심의위원회 구성 (구. 자치위원회)	10인 이내(학부모 과반수)	10명 이상 50명 이내 (1/3 학부모)	2020.03.01
전담기구 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교재량 + 학부모 1/3이상	2020.03.01
가해학생 조치	학교장 요청	교육장 요청	2020.03.01
불복절차	재심청구	행정심판	2020.03.01
신설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2019.09.01

*서로 학교가 다른 경우(가, 피해가 확실)

→ 각 학교에서 사건 조사, 학자체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가해학생 학교에서는 가해 사실 조사서를 피해학교에 제공)

*서로 학교가 다른 경우(가, 피해가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 양쪽 학교에서 사건 조사 후 양 학교 모두 자체해결로 판정 날 경우 학교자체해결로 판정

→ 어느 한 학교에서라도 자체해결 아님 판정이 날 경우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자체해결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한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생별로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 각 처리할 수 있음.

참석자 질의응답 내용 및 개선점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및 교육지원청 심의 기간이 정해져있는가?

- 교육부 답변: 기존에는 자치위 개최가 14일,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 않음.
- 참석자 의견: 기한이 없으면 사안해결이 늦어지고, 기준이 있어야 보다 신속하게 사안처리가 될 것 같음. 기존보다 기한을 늘려 30일 정도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고, 학교자체 해결 기한과 심의기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관계회복프로그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 교육부 답변: 권장사항임.
- 참석자 의견:
 - ① 관계회복프로그램 때문에 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될 것 같음.
 - ② 관련학생이 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도리어 화해를 권장하는)을 가중시킴.
 - ③ 관계회복프로그램 때문에 민원발생이 발생 될 수 있음(잘 해결될 일이, 오히려 어긋남).
 - ④ 관계회복프로그램이 의무화 되지 않아야하며, 의무화 되는 경우 업무가중의 문제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문구로 인해 추후 법적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업무 담당자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3. 학교전담기구의 3분의1에 학부모를 넣어야 하는 이유?

- 교육부 답변: 법 제정 시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 학부모 입장에서의 의견반영 및 업무 투명성을 위해 필요함. * 이미 법률에 지정되어 변경 불가

4. 학교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 선출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회의에 의해 선출하여 위촉해야 하는가?

- 교육부 답변: 학교규칙에 의거, 학교재량으로 선출 가능.

5. 학교 전담기구 교사 구성 요건?

- 교육부 답변: 기존에는 교감, 학교폭력전담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기타 업무관련 교사로 지정 하였으나 현재는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은 없음. 학교 재량으로 필요 인원을 정하여 구성 하면 됨.
- 참석자 의견: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으면, 학교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적극적으로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교사가 없을 것 같음.

6. 학교전담기구의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심의위원의 임기는 정해져있는가?

- 교육부 답변: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
- 참석자 의견: 기준안을 마련할 때, 임기를 학년도(예: 2020.03.01.~2021.02.28.)로 지정하되 학생이 졸업한 학부모여도 위원으로서 실효성 있어야 함.

7. 학교 전담기구의 명확한 역할이 무엇인가? 조사기구인가, 심의기구인가?

- 교육부 답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하지 않았으나,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야함.
- 참석자 의견: 구체적인 역할 및 업무가 뭔지 확인 필요.

8.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자체해결 가능 사안 요건에 있는데, 만약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교육부 답변: 진단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그 요건에 대한 충족으로 봐도 됨.

9.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도 교육청 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 교육부 답변: 사안의 은폐·축소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보고해야 함.

- 참석자 의견: 자치위 심의건만 보고 하도록 개선요망. 학교장의 자체해결은 몰아서 분기별로 수치 정도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음.

10. 성사안의 경우도 자체해결이 가능한가?

- 교육부 답변: 교육부 미답변. 검토 예정임.

11. 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별로 자체해결 또는 자치위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는가?

- 교육부 답변: 피해 측 의견과 전담기구의 심의로 결정.

- 참석자 의견: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있음. 보통 양측 부모의 개입으로 사안의 경중이 아닌, 친분에 의해 자체해결 또는 심의로 갈리는 경우가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기구의 역할 부분에 좀 더 법률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음.

12. 자체해결 등 서식에 관련학생으로 표기하지 않고, 가해학생·피해학생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가?

- 교육부 답변: 이미 법제정 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므로 관련학생으로 표기된 서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쌍방인 경우, 가·피해 자체해결 동의서를 번갈아 2부 받으면 됨.

- 참석자 의견: 가·피해를 조사과정 가운데 나눌 경우 민원이 많아 자치위 결정이 있기 전에는 '관련학생'으로 표기하였는데, 가·피해를 나누는 기준 점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민원이 많을 것임. 관련서식(예: 서면 동의서) 수정 요망.

13. 학교폭력 아님 결정 꼭 교육청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하는가?

- 교육부 답변: 법률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참석자 의견: '학교폭력'아님으로 결정 되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음. 학교 판단 시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가·피해 측의 갈등으로 자치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 담당자는 업무 과중 및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됨.

이 부분 학교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넣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함.

14. 법률상 선 조치를 내린 경우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하나, 선 조치를 내린 후에 자체해결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체해결이 가능한가?

- 교육부 답변: 교육부 미답변. 검토 예정임.

(학교폭력) 사안 보고(교육청 보고용)

보 고 구 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최종	○○교육지원청	학교장 직인
			○○○ 학교장	

구 분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금품 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학생 체벌	사이버 폭력	기타
체크(○)			○								
<중복체크>											

학 교 명		○○○학교	교감	성명: ○ ○ ○		교장	성명: ○ ○ ○	
				H·P: 000-0000-0000			H·P: 000-0000-0000	
관 련 학 생	피해추정 학생(특수여부 기입)				가해추정 학생(특수여부 기입)			
	학교	학년/반	성별	성명	학교	학년/반	성별	성명
	○○중	3/1	남	○○○	○○중	3/1	남	○○○
	○○중	3/1	남(특수)	○○○	○○중	3/1	여(특수)	○○○

발생일시	2019. 00. 00.(요일) 00:00	최초보고	2019. 00. 00.(요일)
접수일시	2019. 00. 00.(요일) 00:00	최종보고	2019. 00. 00.(요일)

사안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	---

특이사항	※ 언론보도 및 경찰 고소 내용 등
------	---------------------

자치 위원회 개최(예정)일	2019년 00월 00일 00시(개최일 미정 시_ 개최예정으로 기입)
-------------------	--

☐ 조치 사항(최초 보고 시 : 선 조치사항 / 최종 보고 시 : 자치위원회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피해 학생	1호: 심리상담 및 조연 등
가해 학생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등

☐ 향후 계획

학 교	○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지원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 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처리되어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함.

◆ 교육지원청 Fax 보고 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사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안 발생 및 전문기관의 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최초 보고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가한 경우도 사안 최종보고 필요
- ※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보고

(아동학대) 사안 보고

보 고
구 분

☐ 최초

☐ 최종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 학교장

학교장
직인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기타
체크(○)	○			○	

<중복체크>

학 교 명 :	○ ○ 학 교	교 장	성명: ○ ○ ○ H·P: 000-0000-0000	교 감	성명: ○ ○ ○ H·P: 000-0000-0000
피해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학 교) (학 년) (성 명)				
발생 일시	2019.00.00.	보고 일시	최초:	2019.00.00.	
접수 일시	2019.00.00.		최종:	2019.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	--------------

특이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자치 위원회 개최(예정)일	2019년 00월 00일 00시 ※ 친권자(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략가능
-------------------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학생	피해아동 일시보호	2019.00.00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
가 해 자	경찰조사 진행중	2019.00.00	덕진경찰서 등

☐ 향후 계획

학 교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향후 보호조치 당부 등			
전 문 기 관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작성자	학 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학생자살 시도 사안 보고서

학교장 <직인>

작성자	(인)	작성자 직위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 학생자살 시도 사안 보고서에 관하여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에 문의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031-380-6010)

I. 자살 시도 학생 정보

1. 성명(성별)	(남/여)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년/반	/
4. 부모직업	부(): ____ 모(): ____ ※ 아래 보기를 보고 부/모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작성일 기준)				
	① 관리자 ② 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단순노무 종사자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학생 ⑩ 군인 ⑪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⑫ 무직(전 직업: _____)				
	⑬ 전업주부 ⑭ 기타() ⑮ 모름				
5. 학교명	(학교 소재지: _____ 시 _____ 군(구))				
5-1. 학교지역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강원 ⑤ 대전 ⑥ 대구				
	⑦ 광주 ⑧ 울산 ⑨ 부산 ⑩ 세종 ⑪ 충북 ⑫ 충남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5-2. 학교유형	① 공립 초등학교 ② 사립 초등학교 ③ 일반 중학교				
	④ 특수목적 중학교 ⑤ 일반인문계 고등학교 ⑥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고, 과학고)				
	⑦ 특성화 고등학교 ⑧ _____ (_____ 사립 고등학교) ⑨ 특수학교				
⑩ 기타 ⑪ 모름					

II. 자살 시도 사안(사고) 내용

1 자살 시도 일시	① 자살 시도 실행 (추정)일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요일), _____시 ② 모름				
	② 자살 시도 발견 일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요일), _____시 ② 모름				
2 자살 시도 장소	① 자택 ② 친척 집 ③ 지인 집 ④ 학교				
	⑤ 직장(아르바이트 장소 등) ⑥ 공공장소(교량, 공원, 건물 등) ⑦ 숙박업소 ⑧ 야산 혹은 교외				
	⑨ 병원 ⑩ 기타() ⑪ 모름				
3. 자살 시도 발견경로	① 학생 스스로 보고 ② 부모의 보고 ③ 친구의 보고				
	④ 교사의 관찰 ⑤ 학교관계자(교사 외)의 보고 ⑥ 기타()				
4 자살 시도 방법	① 투신 ②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③ 본인이 운전해서 교통사고(오토바이 등)				
	④ 약물 음독 ⑤ 화상입히기/분신(방화) ⑥ 달리는 물체에 뛰어들기(지하철 등)				
	⑦ 가스 중독 ⑧ 자기를 때리거나 할퀴기 ⑨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기 몸에 상처내기				
⑩ 목매 ⑪ 파이프 글자 그림 등을 새기(문신 제외) ⑫ 벽이나 책상 등에 신체를 부딪히기					
⑬ 기타() ⑭ 모름					
5. 자살 시도 이유	① 없음 ② 하기 싫은 것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③ 우울/불안 또는 불쾌/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④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⑤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⑥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⑦ 타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⑧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⑨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⑩ 고통이나 자극을 느끼기 위해				
	⑪ 죽고 싶은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 ⑫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⑬ 기타() ⑭ 모름				

IV. 자살 시도 학생 특이사항

※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상황, 심리 및 행동 특성, 취미 및 특기 등 학생의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V. 자살 시도 학생 세부사항

1. 가족형태	① 양부모 (①-1. , ①-2. 재혼가정) ② 부모 이혼 ③ 부모 별거 ④ 부모 사별 (부/모) ⑤ 기타 () ⑥ 모름			
	1-2. 부모 (혹은 주양육자)와의 친밀도는 어떠하였습니까?	<div>매우 안 좋음</div> <div>① ② ③ ④ ⑤ ⑥</div> <div>매우 좋음</div>		
2. 동거가족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부 ⑤ 형·오빠 ⑨ 친척 ()	② 모 ⑥ 누나·언니 ⑩ 기타 ()	③ 조부 ⑦ 남동생 ⑪ 모름	④ 조모 ⑧ 여동생
3. 거주형태	① 가족과 동거 ② 기숙사 ③ 자취 ④ 기타()			
4. 경제적 수준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5. 주수입자	① 부모 맞벌이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부모 모두 실직 ⑤ 기타() ⑥ 모름			
6. 학교생활	6-1. 성 적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6-2. 출결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양호 ② 질병 지각·조퇴 ③ 질병 결석 ④ 무단 지각·조퇴 ⑤ 무단 결석 ⑥ 기타() ⑦ 모름		
	6-3. 학생회 임원 경력	① 없음 ② 있음(임원명 :) ③ 모름		
	6-4. 품행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흡연 ③ 음주 ④ 가출 ⑤ 절도 ⑥ 학교폭력 가해 ⑦ 기타() ⑧ 모름		
	6-5. 교내 징계 및 법적 조치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교내외 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정학 ⑤ 경찰 훈방 ⑥ 보호관찰명령 ⑦ 기타() ⑧ 모름		
	6-6.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div>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음</div> <div>① ② ③ ④</div> <div>매우 소속되어 있음</div>		
	6-7. 교사와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div>잘 지내지 못함</div> <div>① ② ③ ④</div> <div>매우 잘 지냄</div>		
	6-8. 걱정이나 고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교사가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7. 성 격	학생의 평소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div>내성적 ① ② ③ ④ 외향적</div>			

8. 정서·행동상태	학생의 최근 2개월 이내 정서·행동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우울 ③ 불안 ④ 충동성 ⑤ 사회성 문제 ⑥ 공격성 ⑦ 기타 () ⑧ 모름				
9. 건강상태	9-1. 신체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 '9-1-1'로] ③ 모름	9-1-1.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9-2. 정신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 '9-2-1'로] ③ 모름	9-2-1.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10. 최근 1년 이내 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10-1. 개인 문제	① 없음 ② 외모комплек스 ③ 신체건강 문제 ④ 정신건강 문제 ⑤ 기타() ⑥ 모름		10-2. 중독 문제	① 없음 ② 게임 중독 ③ 인터넷 중독 ④ 스마트폰 중독 ⑤ 음란물 중독 ⑥ 약물중독 ⑦ 도박중독 ⑧ 기타() ⑨ 모름
		10-3. 가족 문제	① 없음 ② 가정폭력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의 신체건강 문제 ⑤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⑥ 부모-자녀 갈등 ⑦ 부모 사이의 갈등 ⑧ 기타() ⑨ 모름		10-4. 친구 문제
	10-5. 학업 문제		① 없음 ② 성적부진에 대한 비관 ③ 성적 하락에 대한 비관 ④ 학교 내 성적 경쟁과열에 대한 부담 ⑤ 학습량 과다로 인한 부담 ⑥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부담 ⑦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⑧ 부모의 성적부담 및 압박 ⑨ 학업에 대한 무관심(학습의욕부진) ⑩ 기타() ⑪ 모름		
	11. 자살 시도 직전 사건	① 없음 ② 있음 [☞ '11-1'로] ③ 모름		11-1. '있음'에 답한 경우, 내용을 보기 중 선택해주십시오.	
① 부모와 갈등 ② 친구와 갈등 ③ 이성문제 ④ 형제·자매와 갈등 ⑤ 진로 및 성적관련 사건 ⑥ 문제행동의 발각 ⑦ 주변인의 사망(자살 포함) 및 자살 시도 ⑧ SNS 상의 친구와 관계문제(비방, 갈등 등) ⑨ 교사의 훈계 혹은 갈등 ⑩ 학교폭력 피해 ⑪ 성폭력 피해 ⑫ 기타()					
11-2. '있음'에 답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 1년 내 자해/자살 시도	12-1.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 없이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12-2.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 '12-1-1'로] ③ 모름		① 없음 ② 있음 [☞ '12-2-1'로] ③ 모름		
	12-1-1. 자해시도가 있었다면, 총 ____회, 방법 : _____		12-2-1. 자살시도가 있었다면, 총 ____회, 방법 : _____		
13. 최근 1년 이내 자살사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부모 자살 ③ 형제자매 자살 ④ 친인척 자살 ⑤ 친구 자살 ⑥ 유명인의 자살 ⑦ 기타() ⑧ 모름				

4. 정신건강 지원방법	연계/개입했다고 답한 경우, 개입한 방법이나 연계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이미 외부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포함)		
	교 내	① 없음 ④ 담임교사 상담	② 학교 상담실(학교 내 Wee클래스) ⑤ 기타() ③ 외부기관 프로그램 교내 실시 ⑥ 모름 [☐ 'Ⅷ'로]
	교 외	① 없음 [☐ 'Ⅷ'로] ④ Wee센터 ⑦ 기타()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⑤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⑧ 모름 [☐ 'Ⅷ'로]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⑥ 개인상담센터
5. 개입결과	① 상태 호전되어 종결 ② 개입 중 ③ 개입 중단 [☐ '5-1'로] ④ 기타 () ⑤ 모름		5-1. 개입중단 이유 [☐ 'Ⅷ'로] ① 학생 본인이 중단 의사 밝힘 ② 부모 반대 ③ 연락 두절

Ⅷ.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살은 한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아래의 항목은 자살시도 학생의 담임교사께서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IX. 학생의 자살시도 전 변화사항

1 자살시도 전 학생의 변화	자살시도 전, 학생의 언어, 행동, 정서의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없음 [☐ 'X'로] ② 있음 [☐ '1-1'로] ③ 모름 [☐ 'X'로]	
	1-1. 변화가 있었다면,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모두 체크)	
	내용	
	언어	①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②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한다. ③ 자기비하적인 말을 한다. ④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한다. ⑥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⑦ 편지, 수양록, 노트 등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다. ⑧ 기타()
	행동	① 수면상태의 변화: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잠이 들고 난 후에도 자주 뒤척이고 너무 일찍 잠에서 깬다. ② 변화: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는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③ 주변을 정리한다. ④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⑤ 외모관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⑥ 평소와 다른 기괴하거나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⑦ 집중력 저하 및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⑧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을 보인다. ⑨ 죽음관련 음악, 시, 영화 등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⑩ 어긋났던 인간관계를 갑자기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예전 잘못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등) 신변정리를 한다. ⑪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⑫ 기타()
	정서	① 감정상태의 변화: 죄책감, 수치감, 외로움,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낸다. 멍한 모습을 보인다. 절망감, 무기력감,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 ② 대인기피, 흥미상실: 평소에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 이상 즐기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 ③ 기타()
	1-2. 자살시도 전 학생의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X. 학생의 자살시도 전 친구관계

1. 친구관계	1-1. 교우관계	① 원만 ② 갈등 ③ 소외 ④ 자발적 고립 ⑤ 모름
	1-2.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였습니까?	잘 지내지 못함 ① ② ③ ④ 매우 잘 지냄

XI. 학생의 자살시도 전 행동특성

※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학생 행동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전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낮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흠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